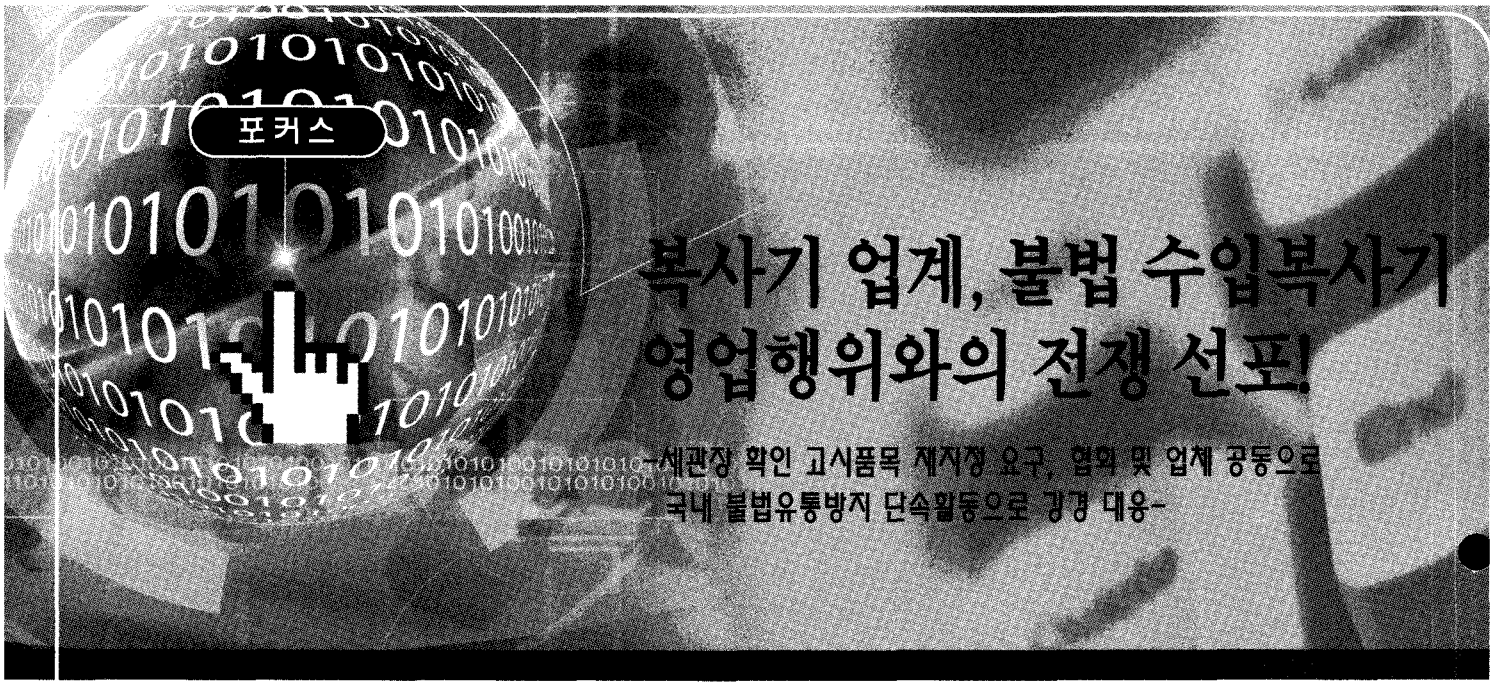


포커스

# 복사기 업계, 불법 수입복사기 영업행위와의 전쟁 선포!

## -세관장 확인 고시품목 재지정 요구, 협회 및 업체 공동으로 국내 불법유통방지 단속활동으로 강경 대응-

불법 수입 복사기 유통으로 인한 산업적 피해 및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지난 99년 수입 복사기의 세관장 확인 고시품목에서 제외된 후 국내에 불법 수입 복사기의 유통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크게는 비정품 및 불법 수입기계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복사기 업계에서는 최근 '(가칭)불법 수입 복사기 유통방지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불법 수입복사기의 유통이 근절되는 날까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내 유통 되기 전 수입 통관절차에서 세관장 확인 고시품목으로 재지정하여 불법기기 유통 초기단계부터 방어해 나가자는 의미로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향후 처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취재 | 박지연 기자 |

작년 10월 17일, 불법 수입 복사기에 대한 일체 단속이 실시된 적이 있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해당 공장을 단속한 결과 총 853대의 불법 수입 복사기중 615대가 이미 팔려나갔고 일부 기계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기계의 대부분의 후지제록스와 캐논 제품. 그중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기계로 캐논 제품이 상당수 차지한다고 한다. 이 사건은 압류기계의 검찰 송치와 업체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어졌다.

그런가 하면 며칠 앞서 지난해 9월말 서울 'H 대학교'에 불법 수입 복사기가 대량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복사기 업체측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결과 20여대의 복사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기기들은 역시 캐논 제품이었다. 이 사건을 접한 복사기 업체측은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에 조사의뢰서를 접수시켰고, 상기 기관에서는 해당 대학교에 조사 방문하여 총무과장 면담 후 업자를 만나 철수 통보를 한 후 각 복사기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현황과 대책 협의를 하기에 이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업계에서는 불법 수입 복사기 유통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미 2001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국광학기기협회와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서울 기동수사대 합동으로 불법 수입복사기 단속 실시 사례도 있긴 하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산업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소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한국광학기기협회 및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불법 수입 복사기,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는 이미 여러번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복사기 비정품 시장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불

법 및 유사 소모품 시장에 군소취급업체 난립으로 일부 품목은 비정품이 완전 장악하여 복사기 업체들간의 출혈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유통질서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서였다. 특히 토너류와 같은 소모품의 경우, 기존 복사기 업체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한 제품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이 정품으로 혼돈하게 하는 경우와 중간 공급자와 복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정상가격을 받고 중간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 사례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같이 비정품 시장이 커진데 에는 사무기기 관련 사들의 관리도 미흡했거니와 불법 · 유사 소모품의 품질향상으로 정품과의 차이가 불분명해진 이유도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젠 정부차원에서 재활용, 리필제품에 대해 활성화시키는 쪽이라 비정품을 단속한다는 자체가 어렵다.

문제는 중고 수입복사기가 계속해서 유통 중에 있고 이런 불법 수입기에 대한 방지대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복사기 관련사의 대리점 해약업체 및 직원들이 퇴사 후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중고기 도입 및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침체로 인해 중고기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개방화로 인한 현행 법규상 아무런 제재 없이 중고기의 세관 통관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사기(신품, 중고)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복사기가 세관장확인대상품목에서 제외되고나서 이를 악용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 · 판매하는 일부 수입업자들이 많아졌다. 이들은 주로 우리나라와 전기규격이 다른 일본, 미국 등지에서 사용되던 중고복사기를 수거하여 수입, 판매하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국내시장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표 1. 안전인증제도 주요 내용**

| 구 분 | 종 전 | 현 재 | 비 고 |
|---|---|---|---|
| 관련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좌동) | |
| 인증명 | 형식승인 | 안전인증 | 2000. 7. 1부로 변경 |
| 인증기관 | 정부(국립기술표준원) | 민간(산업기술시험원 외2) | |
| 취득인 | 국내제조자, 수입판매업자 | 국내외 제조업자 | |
| 취득시기 | 국내 제조품: 공장출고전<br>수입품: 수입통관전 | (좌동) | |
| 인증방법 | 형식구분별 | 모델별 | |
| 수입통관시 | 세관 확인함 | 세관 확인 안함 | 1999. 4. 1부터 |
| 제 3자수입시 | 동종 물품 확인후 가능 | 모든 수입자 가능 | |

**표 2. 불법 중고복사기 관련 현행법 적용 처벌내용**

| 현 행 법 | 주 요 내 용 |
|---|---|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 제7조: 전기용품 수입 · 판매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안된다.<br>▶ 제8조: ①항-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될 때에는 당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수입 · 판매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 대상전기용품의 개선 ·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br>②항 - ①항에 의거 파기 · 수거를 따르지 아니할때에는 전기용품 수입 및 판매자의 부담으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파기 또는 수거할 수 있다.<br>③항 - ①항 ②항으로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볼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제조자 · 전기용품수입업자 · 판매자에 대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교환 · 환불 · 수리 기타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br>▶ (벌칙): 안전인증의(기존의 형식승인)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 진열 또는 보관한 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법 제6조에서 정한 전기사업자 ·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 · 전기공사업자 · 전기용품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기계를 사용할 경우 동법 제16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 후지제록스 최재봉 팀장이 업계 관계자들에게 불법 수입 복사기의 현황에 대해 프리젠테이션 하고 있다.

▶ 지난 2월 18일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는 복사기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불법 수입 복사기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복사기업체 관계자는 "현재 국내 복사기 시장을 형성하는 복사기 주요 3개사는 국내에서 복사기를 제조 및 판매, 수출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각 사 모두 중국 공장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국내 부품 협력 업체도 수백 개가 된다"며 "그런데 중고 복사기가 불법으로 수입, 판매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복사기 업체들의 공장 운영이 어렵게 되고 이에 따른 산업적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는 전기규격이 다르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중고복사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화재나 전기감전 등 사고 발생시 보상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소비자들의 불법 수입기에 대한 인식의 부재도 한몫하고 있어, 관련 복사기업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불법 수입 복사기, 유통의 초기단계 방어가 절실

복사기 관련 비정품 및 중고복사기의 유통경로는 다양한데 특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정보교류 및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부산, 인천항 등을 통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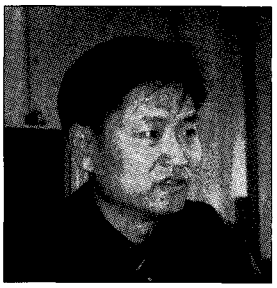
따라서 업계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업체간 공동대응을 통해 불법업자를 소멸시키자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법적대응과 대정부 대응방안 등이 있는데 복사기 각 사는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대응을 하고 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또한 중고복사기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는 현행법을 통해서 소비자 고발을 적극 홍보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시켜 대응하고 고발 및 고소 조치를 취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맞춰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수입중고 복사기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처음 국내 유입되는 시점부터 창구에서 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다. 현행 관세법에는 중고품과 신제품 구분도 없을뿐더러 수입할 때 전기용품 안전승인의 사전확인 품목에서도 제외돼 중고복사기가 안전승인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불법 수입 중고 복사기 유통의 대응방안으로 처음 수입통관시 세관에서 확인하는 품목에 추가(HS 9009.12-0000)해줄 것을 요청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2월 18일 관세청장 앞으로 중고복사기 불법 수입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공문을 접수시켰다. 세관장확인대상품목으로 고시하여 불법제품이 원천적으로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망하는 내용이다. 이미 지난 2002년 7월 협회에서는 산업자원부에 세관장 확인 대상 수입물품 추가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협회와 업계가 한데 힘을 모아 불법 수입복사기의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일차적으로는 관세청 등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건의해 나가고 이차적으로는 불법 복사기에 대한 단속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다.

인터뷰/한국후지제록스(주) 마케팅부 시장관리팀 CS Desk 최재봉 팀장

# "불법 복사기 차단, 정부 · 업계 · 소비자가 공동 대응해야"


▶최재봉 팀장

지난해 9월 서울 H 대학교에 불법 수입 복사기가 대량 설치된 것과 관련, 말로만 듣던 불법 수입 복사기가 어떤 식으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인식이 없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했다는 최재봉 팀장은 이후 업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불법 복사기 차단을 위해 선봉에 나섰다.

**Q 동종 업계에선 유일하게 CS Desk를 운영하게 된 동기는?**

**A**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선진국일수록 정당하게 세금내고 양심적인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부정한 방법의 업자가 버젓이 존재하고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양심적인 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우리회사의 경우 불법영업업자, 비정품, 불법 수입기계 등으로 매출의 약 20%를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회사의 회장님, 부사장님과 같이 일본에서 현실을 겪으신 분들은 이러한 국내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동사는 물론 한국의 미래는 절대 보장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동종 업계에서 유일하게 CS Des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CS Desk 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가?**

**A** 가깝게는 사내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불법 제품,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불법 제품 및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처리를 하고 단속을 벌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CS Desk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A** 불법영업 행위의 근절은 관계기관을 통한 수입통관시 세관장 확인 고시품목의 재지정이 시급하다보지만 이에 대한 해결을 당장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또한 우리회사만 열심히 활동한다해도 이 또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종업계의 모든 업체가 동참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내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Q 「불법 수입 복사기 유통방지 대책 협의회」의 성격과 향후 활동 계획은?**

**A** 앞서 말한 바대로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업체만 열심히 활동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종업계가 단합을 했을 때에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협의회입니다. 협의회를 통해 업체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으로 관계기관에 조사의뢰와 단속을 강력히 요구하고 협의회 안에서도 국내 불법 유통방지 단속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세관장확인대상품목으로 고시하여 불법제품이 원천적으로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망하는 정책건의를 적극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규제완화는 쉬운데 반대로 규제 강화는 어렵다"는 관세청 담당자의 말처럼 이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2단계로 업계 및 관련 단체와 힘을 모아 단속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인데 이 또한 한정된 인원을 통해 상시 단속은 힘들고 또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협회에 신고센터를 둔다든지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